

중국의 초강대국화와 한반도의 미래

이동률

중국의 초강대국화와 5세대 리더십

중국은 2012년 가을 18차 당대회에서 총서기를 비롯한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정치국 상무위원, 그리고 2013년 봄 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주석, 총리 등 주요 정치엘리트의 대대적인 권력교체가 예정되어 있다. 이번 권력교체에서도 덩샤오핑(鄧小平)시대부터 내부 규범으로 제시된 연령제한과 3연임 제한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국 위원 이상의 경우 15차 당대회에서는 70세, 16차 당대회와 17차 당대회에서는 68세 연령제한이 적용되었다. 2012년에도 68세 연령제한이 적용된다고 한다면 현 정치국 상무위원 9인 가운데 시진핑(習近平)과 리커창(李克強)을 제외한 7명은 모두 퇴임 대상이 된다. 그리고 정치국 위원 25명 중에서도 14명이 퇴임해야 한다(Miller 2010, 1-10).

따라서 이번 권력교체는 2002년 후진타오(胡錦濤)-윈자바오(溫家寶)체제가 출범한 이래 10년만에 이루어지는 대대적인 권력교체로 소위 중국의 기존 4세대 리더십에서 5세대 리더십으로의 세대교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들 5세대 리더십은 기존의 권력교체의 패턴을 유지한다면 2012년부터 2022년 20차 당대회까지 10년간 중국을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이 시기는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절호의 시기”(戰略機遇期)로 간주되고 있다. 중국은 이른바 국가대전략 구상을 통해 세

계적 강대국으로서의 위상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전략구상은 창당 100년(2021년)이 되는 2020년 “전면적 소강(小康)사회의 실현” 그리고 건국 100년(2049년)이 되는 2050년 “중등 선진국가로의 성장”이라는 비전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즉 5세대 리더십이 집권하는 10년의 시기는 중국이 건국 100년에 강대국으로의 부상을 완성하는 기반을 다지는 중간 지점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5세대 지도부는 대대적인 세대교체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기본적으로 정책에서 변화보다는 연속성의 성격이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기존과 같은 전임자의 낙점 방식이 아닌 경쟁 방식을 통한 권력이양이라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민주적 절차가 결여된 상황에서 안정적인 권력계승이 유지된다면 그 자체가 정책의 급격한 변화보다는 연속성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 즉 중국의 권력 계승에서 여전히 전임자의 영향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 정책의 연속성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시진핑 체제는 최고위 권력자인 특정 개인이나 국민보다는 권력의 위임주체인 당 지도부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5세대 지도부는 상당 기간 후진타오, 원자바오, 쩡칭훙 등 4세대 지도부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으며 정책 기조 역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변화를 예상하기는 어렵다. 2012년 이후 일정 기간 후진타오, 원자바오와 같은 전임 정치엘리트의 영향력이 지속되면서, 새로운 5세대 정치엘리트와 정책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시진핑의 개인적 리더십 등을 고려할 때 후진타오 체제보다도 더 집단지도체제(collective leadership)의 성격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즉 정치국 상무위원 9인이 각각 책임영역을 분담하는 집단지도체제가 보다 강화될 것이며, 따라서 정책결정이 특정 개인이나 소수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복잡하지만 보다 정교해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용이치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중국 지도부에서는 전통적으로 중국 체제의 안정성은 엘리트 정치에 달려 있고, 엘리트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권력승계이며, 권력승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안정은 담보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이는 역으로 권력 엘리트 내부에서 체제유지에 대한 위기감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권력교체는 물론이고 정책적 이견으로 인한 내부 분열 또는 갈등의 대외적 노출이 야기할 수 있는 위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일단 정치 엘리트들 간의 내부 단합을 중요한 가치로 상정하고 있고, 혹시 내부적으로는 이견이 발생하더라도 이것이 외부로 표출되는 것은 극도로 자제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현재의 추세로 볼 때 향후 10년이 중국 부상의 성패와 방향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시기라는 데에는 지도부 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통의 인식이 갈등을 봉합하고 조정하는 힘의 원천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즉 정치 엘리트집단 내에 공멸의 위기 공감대와 함께 공생의 기대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강대국화를 주도할 5세대 리더십은 높은 교육수준과 개혁기 빈번하게 전개된 대외교류 경험에 힘입어 서방 사회와 가치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개혁개방 초기인 1980년대 서구화 열기와 1990년대 민족주의 고조 현상을 모두 경험한 세대로서 서구의 영향을 많이 받고 또 미국을 비롯한 서방을 이전 세대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일반적으로 대외지향성이 높지만 반드시 친미, 친서방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들은 미국과 서구의 도덕적 우월감과 간섭주의에 냉소적이다. 이들은 중국발전에 대한 자긍심

1)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5세대 지도자들이 이례적으로 공식 석상에 강경발언을 한 점이 주목된다. 예컨대 시진핑은 2009년 2월 멕시코를 방문했을 때 서구정치인들이 중국의 국내문제에 간섭하는 것에 대해 거칠게 비난했던 사례가 있다. 그리고 왕치산 부총리 또한 중미 전략경제대화에서 대미 최대 채권국으로서 미국 경제에 혼수를 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을 바탕으로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대화 상대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¹⁾

이와 관련 부국강병의 실현으로 대변되는 민족주의 고조 현상이 대외적으로 어떻게 관리될 것인가도 주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민족주의가 대외적으로 투사될 경우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예컨대 내부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대국으로의 부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고조되고 있다. 그만큼 대외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영향력이 제고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5세대 리더십은 상대적으로 독점적 통치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화민족주의를 국내용으로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것이다. 따라서 국내용 중화민족주의가 적절하게 통제되고 관리되지 못한 채 의도하지 않은 대외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미 중국은 최근에 기존의 영토, 주권, 안보에 덧붙여 발전 이익까지 추가하여 소위 '핵심이익'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확장시켜가고 있다.²⁾ 이러한 핵심이익에 대한 정책적 융통성은 5세대 리더십에게 더욱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다른 한편 2020년까지 중국은 여전히 경제력을 포함하여 모든 분야에서 미국에 필적하지 못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집권기간 미국과의 대결적 상황을 회피하려 할 것이다. 특히 미국과 군사영역에서의 경쟁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선택할 것이다. 그러면서 경제, 환경 등 개도국의 입장에서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개도국 대(對) 선진국의 구도를 만들며 미국과의 국제규범을 둘러싼 경쟁을 시도할 수 있다. 즉 중국은 미국과 협력과 경쟁을 병행하면서 국력을 신장시키고 국제사회에서 국가이미지를 제고시키며 또한 규범제정 과정에 참여하면서 강대국으로의 부상을 추구해 갈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경제, 환경, 에너지 등 비전통 안보영역에서부터 점진적으로 국제적 발언권을 확대해 나갈 것이고, 이에 따라 향후 이들 영역에서 미국과 국제규범을 둘러싼 갈등이 노정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천안함사건 이후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중국의 강경한 반응은

세계 경제위기를 겪은 뒤 국제사회에서의 자아의식 제고, 경제영역에서의 발언권 강화 추세 속에서 미국의 대중 포위에 대한 전략적 불신과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중국 부상의 선행적 실행 의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은 유엔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이 천안함사건의 종결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고, 이어서 6자회담이라는 출구전략으로 이행하고자 희망하고 있었다.³⁾ 그런데 의장성명 채택 이후 중국의 기대와는 달리 한미가 대규모의 연합 군사훈련을 전개하자, 중국은 한미가 인접지역인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고조시키고 나아가 북한에 대한 압박 이상의 의도, 특히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항공모함의 훈련참여와 관련하여 자유항해권이라는 국제규범을 들고 나오고, 하노이 아세안지역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에서도 클린턴 국무장관이 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하자,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공언한 '핵심이익'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갖게 되면서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대응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내 한껏 고양된 중화민족주의 정서 또한 중국 내 군부 등 강경세력의 목소리를 강화시키고 있었다.

천안함사건으로 촉발된 미중 간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갈등은 외형상 분명 지역에서의 세력경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 자신의 지역기반을 확장하려는 중국과 전통적 지역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미국 간의 갈등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세력경쟁의 외형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미중 양국이 직면한 현실과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본격적인 세력경쟁과 충돌로 발전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2)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핵심이익은 “국가의 주권, 안전, 영토 보전 및 발전 이익”(中國的核心利益是指國家主權、安全、領土完整和發展利益)이라고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7월 13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 기자회견).

3) 의장성명 10항은 이러한 중국의 의도가 투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즉 “분쟁을 회피하고 상황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 적절한 경로를 통해 직접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 수단으로 한반도의 현안들을 해결할 것을 권장한다.” <http://www.mofat.go.kr/state/multipldiplomacy/unitednations/index.jsp>(검색일 : 2010/11/20).

세계경제위기는 미중관계에서 과거에 비해 중국의 상대적 목소리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중국의 강경한 외교는 일부 경제영역과 동아시아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이러한 태도 변화가 바로 기존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 및 미국과의 본격적인 세력 경쟁을 촉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시기상조라 할 수 있다. 최근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논란에 대해 “중국이 미국을 대체해서 세계의 패권국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신화이다.”(戴秉國 2010)라고 단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부정하면서 조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미중 양국이 현안별로 경쟁과 갈등을 지속할 수는 있지만, 중단기적으로는 상호 상대의 지위를 인정하고 협력하는 것이 불가피함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의 해외진출(走出去)이 활발해지면서 이에 상응하여 중국의 외교무대 역시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2009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565억달러(68조원, 세계 5위)로 2002년의 57배에 이른다. 투자지역도 180개국에 달하고 있다. 해외 에너지 의존도 역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만큼 중국이 보호하고 관리해야할 이해관계가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자원확보를 위한 원양해군력 증강의 필요성도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은 핵심이익론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토,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대만, 티베트, 그리고 나아가서 남중국해, 조어도 등 영해 영유권, 그리고 에너지, 해외투자 자본 등 경제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확장된 다양한 수단을 통해 보다 강경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 및 인접 국가들과 갈등이 재개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중국의 초강대국화와 2011년 미중 정상회담

21세기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시점인 2011년 1월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것은 당연했다. 이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상호존중, 호혜공영의 협력동반자관계 건설”이라는 양국관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실제로 ‘상호존중’과 ‘호혜공영’이라는 단어가 이번 정상회담의 키워드가 되면서 사실상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성격을 대변해주고 있다.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미중 양국은 2010년 벽두부터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오바마 대통령의 달라이 라마 면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영유권 문제, 천안함과 연평도사건, 위안화 평가절상 문제, 그리고 류샤오보(劉曉波) 노벨평화상 수상에 이르기까지 사사건건 마찰을 빚어 왔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신냉전의 도래를 우려하기도 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러한 우려를 완화시키며 양국관계가 다시 협력기조로 전환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쇼윈도우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이동률 2011).

특히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각각 “강력하고 번영하며 성공적인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정, 그리고 번영에 기여하고 있음을 환영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상호존중”의 정신을 십분 과시하기도 했다(中華人民共和國與美利堅合衆國聯合聲明 2011).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천안함 사건이후 진행되었던 미중 간의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 경쟁, 즉 자신의 지역기반을 확장하려는 중국과 전통적 지역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미국 간의 갈등이 적정선의 타협점을 찾아 봉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요컨대 미중 양국 모두 현재 본격적인 세력경쟁 국면으로 발전하는 것은 양국의 이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현실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중국은 명실상부

한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상당기간 동안 체제 내의 부상을 진행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미국과의 협력은 현실적 전략적으로 필수적이다. 특히 중국은 2010년 이후 미국과의 갈등으로 인해 과거 10년간 쌓아온 외교적 성취를 상당부분 상실하는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중국은 이번 후 주석의 방미와 정상회담을 활용하여 이른바 “강경하고(assertive) 거친 힘의 외교”를 구사하는 국가라는 대외적 이미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중국은 한반도를 둘러싼 양국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뚜렷해 보였다. 이는 중국이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를 언급하는 가운데 새삼스럽게 냉전이 침예한 시기 미중관계 개선을 모색했던 1971년 핑퐁외교 40주년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데서도 엿볼 수 있다. 즉 중국은 미중갈등의 핵심은 아니었지만 뜻밖에 격화된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조기에 수습하려는 의지가 강했다. 아울러 2012년 10년만의 5세대 지도부로의 대대적인 권력교체를 앞두고 있는 중국에게 체제안정이 다시금 최대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역시 이라크 철군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 이란 문제, 그리고 국내 경제회복 문제로 인해 중국과의 협력적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했다.

아울러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단일 국가가 주도하는 국제질서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대신, G2, G20 등 새로운 국제적 다자주의가 글로벌 거버넌스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국제정치의 현실 또한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통해 재확인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 어떤 국가도 현실적으로 국제체제의 독점적 리더십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상호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양제츠(楊潔篪) 중국 외교부장이 이번 후진타오 주석의 방미를 “중미 간 협력동반자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한 여정”(開創中美夥伴合作新局面之旅)⁴⁾으로 평가하는 것처럼 향후 미중관계를 낙관적으로만 전망할 수 있을지에

4) 開創中美夥伴合作新局面之旅—外交部長楊潔篪談胡錦濤主席對美國進行國事訪問(2011/01/22)
<http://www.fmprc.gov.cn/chn/pds/ziliao/zt/dnzt/hujintaozhuxifangwenmeiguo/t789064.htm>(검색일 : 2011/01/30).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아 보인다. 이번 정상회담은 6개 부분 41개 항목으로 구성된 방대한 공동성명이 상징하듯 전체적으로는 양국이 상당한 영역에서 합의에 도달하고 있음을 보여주려 한 의지가 읽혀진다. 예컨대 두 정상은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핵 안보 강화, 극단주의 대처, 초국적 범죄 대처, 전염병 및 기아 퇴치, 해적행위 소탕, 자연재해 예방, 사이버보안 강화, 인신매매 단속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합의에 도달했다. 그런데 이들 사안은 원래 양국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영역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심각하게 갈등을 겪었던 사례도 거의 없다. 애초부터 쉽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사안들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정작 공동성명의 내용을 보다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2010년 양국 간 갈등을 야기했던 쟁점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봉합되거나, 아니면 이견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예컨대 인권, 대만, 티베트 문제와 같은 전통적인 양자 간 이슈에서 여전히 입장차이를 분명히 했다. 후 주석은 워싱턴에서 한 연설을 통해 “대만과 티베트 관련 문제는 중국의 주권에 관련된 핵심이익으로 13억 중국 인민의 감정과 관련된 것”이라며 예의 ‘핵심이익론’을 제기하였다. 위안화절상 문제 또한 일단 450억달러어치의 대미 수입패키지로 임시 봉합하는 선에서 접점을 찾았다. 그리고 북핵문제 역시 원론적으로는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또한 불씨를 남겨두고 있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담은 외교적 수사를 통한 비전 제시에도 불구하고 미중이 향후 세계질서의 운영에 대한 어떠한 청사진(architecture)에 합의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제시해주지 못했다. 양국 정상 공히 일정 정도는 이번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어야 하는 정치적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구동존의(求同存異)의 타협을 이끌어낸 측면도 있다. 2012년 퇴임을 앞둔 후진타오 주석은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을 넘어 미국과 대등한 강대국으로 부상하

고 있음을 대내외에 각인시켜 리더십의 정당성과 안정성을 강화해야 할 정치적 동기가 있었으며, 오바마 대통령 또한 재선을 앞두고 중국으로부터의 일정한 경제적 양보를 얻어내 경제회복에 일조했다는 성과가 필요했던 것이다.

요컨대 미중관계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단은 갈등을 봉합하고 협력적 관계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협력관계가 안정적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미중관계는 공동성명에 명시했듯이 “매우 중요하면서도 복잡한 관계”로 변화, 발전하고 있다(中華人民共和國與美利堅合衆國聯合聲明 2011). 냉전시기 미소 양극체제와 달리 미중관계는 갈수록 상호의존성이 높아지고 협력의 동기 또한 확대되고 있는 한편, 경쟁적이고 갈등적인 이슈들을 내재하고 있고 심지어 세력대결적 속성마저 지닌 복잡한 관계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 역시 이러한 미중관계의 복잡성의 단면을 확인해주고 있는 것이다. 향후 미중관계도 이러한 복잡한 모습과 요인들이 상호작용하고 교차하면서 경쟁, 갈등, 협력이 반복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양국관계의 복잡성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할 경우, 취약한 안보구조와 분열적 국내정치 지형을 지닌 한국에게는 예상치 못한 강한 충격을 전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목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매우 이례적으로 한반도 문제가 핵심 의제로 대두되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양국이 다른 중요한 쟁점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반면에 한반도 문제에서는 큰 틀에서 타협을 이루어냈다는 것이다. 양국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로 인해 긴장이 고조된데 우려”를 표명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가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다(中華人民共和國與美利堅合衆國聯合聲明 2011). 그리고 그 기반 위에서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남북대화화 6자회담의 재개를 해법으로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북한이 주장한 우라늄농축 프로그램(uranium enrichment

program: UEP)에 대한 우려를 공동성명에 포함시키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에 미국은 UEP에 대한 우려 표명으로 한국이 남북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고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 개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미중 정상회담의 중요한 성과라는 부연 설명까지 덧붙이고 있다. 미중 양국이 남북대화와 6자 회담에 남북한을 각각 유도해 내기 위한 최소한의 여건을 조성하려고 주고받기식의 타협을 이룬 흔적이 역력하다.

중국의 초강대국화와 한중관계

한중관계 발전의 과정과 특징

한중관계는 수교 18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냈다. 2010년 기준으로 한중 간 교역액 1,884억 달러, 연 595만 명의 인적교류라는 지표는 수교이후 폭발적인 증가를 통해 이루어낸 것이다. 특히 한중 간 무역액은 심지어 한미와 한일 무역액을 합친 규모를 초과하고 있다.

한중관계의 비약적 성장은 수교 이후 외형상 크게 5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발전해왔다. 이러한 단계적 발전 과정은 중국의 강대국으로의 부상과 그에 따른 외교 전략의 진화 과정과 궤를 함께해왔다(이동률 2008a, 227-238). 첫째,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 이후 중국은 보다 적극적인 경제발전전략을 추진하면서 경제협력선의 다변화와 평화적인 안보환경의 확보를 위해 인접국에 대한 선린외교를 전개하였고, 이 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20여개 국가들과 수교 외교를 전개했다.⁵⁾

둘째, 1994년 리펑(李鵬) 총리의 한국 방문을 통해 중국이 기존의 '북정남경'

5) 당시 중국의 선린외교는 한중수교를 전후한 시점에 1990년에 싱가포르, 1991년에 부르나이, 1992년 카자흐스탄 등 주변 국가들을 중심으로 1990년대 초반에 무려 20여개 국가와 관계정상화를 하는 전례없는 적극적인 수교공세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北政南經)의 한반도 정책에서 실리외교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1992년과 1994년 한국의 노태우, 김영삼 두 대통령의 연이은 중국 방문이 있은 이후, 비로소 성사된 최초의 중국 총리의 한국 방문에서 당시 리펑 총리는 남북한관계에 대해서 자주독립의 원칙을 견지할 것을 강조하면서 남북한에 대한 실리외교 추진 의지를 암시했다. 중국의 한반도 실리외교는 기존의 한반도 관련 정치 및 안보쟁점에서의 북한에 대한 일방적 지지 태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중국이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문제와 관련하여 공개적으로 북한과는 다른 입장을 표명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시기에 중국은 천안문사건과 냉전종식으로 촉발된 미국과의 갈등 관계가 1993년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MFN) 연장 문제로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전략적 고려가 내재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전방위외교를 적극 전개하고 있었다.

셋째, 한중관계는 1998년 11월 김대중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이른바 '동반자관계'라는 새로운 형태로의 관계 진전이 이루어졌다. 김 대통령의 방중기간 '21세기 협력적 동반자관계' (面向21世紀合作夥伴關係)로 발전을 공식 선언한 데 이어서 2000년 10월 주룽지(朱鎔基) 총리 방한 시 한중 양국은 군사안보 분야를 포함하는 협력분야의 다변화에도 합의하였다. 이시기 중국은 15차 당 대회를 통해 국내적으로 장쩌민 체제를 공고화하고, 경제발전과 국제적 지위 향상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책임대국론, 신안보관을 제시하며 미일 신안보조약 체결을 통해 강화되고 있었던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고 있었다. 즉 당시 중국은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제고하고 미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다극화 전략을 제시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동반자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넷째, 한중 양국은 2003년 7월 노무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통해 2000년 이후 사실상 진행되어온 양국협력 및 교류의 확대를 '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 (全

面合作夥伴關係) 합의를 통해 공식화하게 되었다. 2003년에는 중국에서 후진타오 체제가 출범하면서 ‘평화굴기’, ‘평화발전론’을 통해 중국의 부상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3자 및 6자회담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책임대국’으로서의 정체성을 구축하려는 시도가 진행된 시점과 궤를 함께했다.

다섯째, 2008년 5월 27일 이명박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한중 양국관계는 기존의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에서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戰略合作夥伴關係)로 격상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에 있었던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통해 양국정상은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 개최를 전후하여 중국의 강대국화 일정을 보다 구체화시켜가고 있었으며, 그러한 맥락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영국(2004) 등 유럽강국, 인도, 파키스탄(2005), 베트남(2008), 한국 등 지역 미들파워, 그리고 나이지리아, 남아공화국(2006) 등 남미와 아프리카 자원 부국들과 연이어 전략적 동반자관계로의 격상을 진행시켜 왔다(김홍규 2009, 287-303).

중국의 부상과 더불어 진행된 한중관계의 발전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함에 따라서 중국의 다극화 및 대국화 전략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전략적 비중 또한 단계적으로 증대해 왔다. 특히 한중관계의 5단계에 걸친 발전과정은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역이라는 측면에서 중국에게 여타의 인접 국가들과는 다른 특별한 전략적 함의를 갖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중국의 부상이 진행됨에 따라 중국 외교전략에 있어서 대미전략의 비중이 증대되는 것에 비례하여 그 종속 변수로서의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 또한 증대되어 왔다. 따라서 중국 부상의 가속도가 더해질수록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한중관계는 중국의 대미전략과 미중관계에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중국이 부상하는 과정에 비례하여 한국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평가도 제고되었다는 것은 중국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한중관계 발전은 일정 정도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한중관계의 발전과 북중관계의 상대적 후퇴는 중국이 지정학적 중요성이 큰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보의 주 대상을 북한에서 한국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1990년대 이후 한중 간 경제협력이 확대되고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중국외교에서 미국의 비중이 커지고 중미 간의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관계가 진행되면서 한국에 대한 영향력 확보 필요성이 더욱 더 증대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가 미국과의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다.

셋째, 한중관계에서 미국 요인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되는 반면에 한중관계의 가장 중요한 전통적 변수였던 북한 요인은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3년 북핵문제가 불거지면서 외형상 북한 요인이 다시 부각되는 듯 보였지만 실상은 전통적인 북한 요인과는 다른 차원과 내용으로 한중관계에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북핵문제를 전통적인 북중관계 차원에서 인식, 접근하기보다는 중국의 주변 안보환경, 중미관계, 그리고 동아시아 안보질서에 영향을 주는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발전의 과제

중국의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의 발전은 이른바 평화굴기, 평화발전론 등 중국의 대국화 담론 제기와 시기적으로 일치한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 대로 중국이 전략적 관계로 전환시키고 있는 대상 국가들은 대개 러시아, 프랑스와 같은 대미전략상 중요한 강대국, 또는 인도, 파키스탄, 아세안, 한국과 같은 지역 미들파워, 그리고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의 자원부국으로 대별된다. 모두 중국

의 부상을 위해 중요한 협력 대상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동아시아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발전 역시 강대국으로의 부상을 위한 인접지역 외교의 일환임을 알 수 있다. 예컨대 2008년 5월 전격적으로 중국이 한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의 “격상”을 추진한 것은, 그 해 4월 한미 전략동맹관계 강화에 대한 반응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상현 2008, 6-8). 실제로 중국에서는 동반자관계가 냉전시기의 동맹관계를 대체할 수 있는 탈냉전기의 이상적인 협력관계인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이 5개 국가와의 쌍무적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것에 대한 우회적 견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국과의 전략적 관계 발전이 필요한 배경으로 첫째, 북핵 2·13합의와 남북 정상회담 등으로 한반도의 통일과정이 진전되고 있으며, 둘째, 동북아의 경제발전과 협력 활성화로 지역경제 입지가 상승하는 한편, 이와 더불어 동북아 지역에는 여전히 안보딜레마의 문제가 병존하는 모순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 동북아 지역에서 냉전시대와 달리 테러, 분리주의, 해상운송안보, 생태환경파괴, 질병유행 등 비전통 안보가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徐文吉 2007). 이상의 변화된 환경과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중 간에도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중국은 파키스탄과의 관계를 하나의 전례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한중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했다는 외견상의 의미보다는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과의 관계에서 전략적 요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당시에 한미 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체결 합의, 북핵 2·13합의와 이에 따른 북미, 북일관계 개선 움직임 등 일련의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역학구조의 변화 조짐이 나타났고, 한반도 평화체제, 동북아 안보협력 문제 등이 한중관계에서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되었다. 이는 결국 한중관계의 전략적 관계로의 발전이 단순히 외향적 발전과정으로 단정지를 사안이기보다는

중국의 부상이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서 한중관계에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그 만큼 한중관계의 유동성의 변수와 폭이 증대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구체적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양국사이에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협력의 범위를 지역적 세계적 차원의 현안으로 확대한다는 것이고, 둘째 양국 간 협력을 군사 및 안보 분야까지 포괄하는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해간다는 것이다. 셋째, 양국관계가 당면한 현안과 더불어 중장기적 비전을 갖고 발전을 지향해간다는 것이다. 대체로 거시적이고 포괄적이며 미래지향적이면서 추상적인 내용들이다.

그런데 최근까지의 상황으로 볼 때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에 부합하는 내실 있는 관계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아 보인다. 우선 중국의 부상은 중국의 이해관계를 전세계로 확대시키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미국 못지않게 세계적 이슈가 주관심사항인 세계적 영향력을 지닌 국가로 변모해 가고 있다. 이는 한중 양국 정부가 협상테이블에 올려놓을 공통의 의제들이 양자 간 문제 외에는 오히려 점차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아울러 한중 간에는 현재 양자 간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조차 이해와 신뢰의 문제를 안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지역 또는 세계적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의미있게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군사 분야의 교류와 협력 역시 여전히 외화내빈의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한중관계에서 과연 군사 안보 분야의 협력 확대가 시급하며,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마저 불러일으킨다. 양국관계는 전략적 관계로의 격상 이후 사실상 장기발전의 비전을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장기적 비전을 논의하고 공유하기

위해서는 우선 양국 간 이해와 신뢰의 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전략적 관계 발전을 논하기에 앞서 양국관계의 기초(fundamental)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수교 이후 한중관계는 경제협력의 동인과 외부적 요인, 즉 북한 요인과 미중 관계에 영향을 받으면서 비정상적인 밀월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관계발전을 촉진했던 동인들의 작용이 축소 또는 변화하고 있는 반면에 양국관계가 다변화되면서 양국의 국내 정치사회 문제들이 양국관계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관계발전 초기의 탐색, 그리고 북한이라는 특수한 변수의 작용으로 잠복 또는 봉합되어 왔던 갈등요소들이 현안으로 부상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양국관계는 지난 18년의 모색과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특수한 밀월관계에서 탈피하면서 호혜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동시에 양국의 이해가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되는 관계로 전이해가는 과정에 진입하면서 국내변수들의 영향이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양국관계가 다변화되면서 정부 간 공식적 관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 영역에서의 교류와 협력 또한 자연스럽게 확대 심화되고 있다. 이는 관계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동시에 양국관계 구조가 보다 복잡해지고 그만큼 양국 국내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새로운 현안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중국이 부상하는 과정에서 고도성장 위주의 불균형 발전전략이 전개되면서 후진타오 체제에 들어와 개혁 후기의 후유증으로 다양한 형태의 집단시위가 빈발하게 되었다. 이에 외부 안보위협보다는 국내 체제안정이 최우선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중화주의와 애국주의에 대한 호소를 통해 국내 통합과 체제안정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이동률 2011). 한국 또한 과거 어느 시기보다도 각 이해집단의 이익 표출이 강렬한데다가 민족주의 정서도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어느 국가보다도 활발한 교류가 진행되고 있는 한중 양국 간에는 이러한 양국 내에 확산되고

있는 민족주의 정서와 이익 분출이 충돌될 개연성도 높을 수밖에 없다. 최근 한중관계의 갈등요인으로 대두되었던 2002년 월드컵 경기 논란, 조선족문제, 마늘분쟁, 역사왜곡 논쟁 등이 바로 사안의 본질 외의 문제로 격화되고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면에는 양국의 국내적 정서와 상황의 반영, 그리고 상대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국내적 요인의 작용에 의해 외교적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는 한중 양국이 지리적 근접성, 인종적 유사성, 공통의 역사적 경험 등으로 인해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대중적인 착시현상이 존재하고 있고, 이로 인해 변화하고 있는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고 상대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팽배해지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오해와 왜곡을 시정해주어야 할 주된 책무가 있는 양국의 언론들마저 그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 향후 이러한 국내적 요인들은 중국과 한국의 국내정세의 변화에 따라 더욱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중국의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

중국 5세대 지도부의 최대 국가 목표는 이른바 ‘중화민족의 부흥’으로 대변되는 강대국화의 실현이다. 이에 따라 중국 외교정책의 목표 또한 국력 증강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정된 주변 국제환경을 조성하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글로벌 파워로서의 위상을 평화적인 방식을 통해 획득하는 것이다. 인접지역은 바로 이러한 중국의 강대국으로의 부상의 기반이다. 따라서 중국은 우선적으로 인접지역에서 안보딜레마 해소와 영향력 증대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데 외교력을 집중할 것이다.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정책기조 역시 “중국의 부상을 위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라는 선린외교의 기조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통한 대국으로의 입지 강화”라는 대국외교의 기조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부상이 진행되면 될수록 안정지향의 선린외교보다는 영향력 확대라는 대국의 교로의 무게중심이 옮겨가게 될 것이고,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대미정책과 중미관계에 더욱 종속될 것이다. 다시 말해 중국 부상이 진행되면 될수록 미중 간 갈등과 경쟁이 한반도로 전이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부상이 동아시아에서 선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동아시아 발 미중 갈등, 심지어 한반도 발 미중 세력경쟁이 초래될 가능성도 상정할 수 있다. 최근 천안함사건 직후의 미중 간의 갈등은 이러한 가능성을 일깨워준 사례라 할 수 있다.

요컨대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관심의 초점은 국제사회에서의 세력 판도의 변화이다.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역학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것이 중국의 부상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세력구조 변화에 민감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북한체제의 변화, 한반도 통일문제와 더불어 한미 동맹관계가 가장 핵심적인 관심대상일 수밖에 없다.

중국은 미국의 견제에 우회적으로 대응하면서 중국의 평화적 부상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동반자 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중국은 신안보관과 신외교전략에서 전략적 동반자관계는 동맹체제에 대한 대안적 함의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입장에서 원론적으로는 한미 동맹관계와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는 양립하기 힘든 관계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상충하는 두 형태의 양자관계가 일정기간 공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는 것을 수용하고 있다. 중국의 동반자외교의 목표는 중국의 평화적 부상을 위한 국제환경 조성에 있고, 이와 관련 미국의 지지 또는 묵인은 전제조건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현실적인 차원에서 중국의 동반자외교는 미국과의 협력을 유지하면서 미국 중심의 동맹체제를 우회적으로 견제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영향력과 이해관계가 강한 한

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에서 중국의 동반자외교는 상당기간 동맹체제와의 불편한 동거가 불가피한 현실을 수용하면서 점진적인 방식을 통해 동맹관계의 대체를 지향하는 장기적인 접근을 모색할 것이다.

중국의 한미 동맹관계에 대한 태도는 현실적으로 미중관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미중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는 한, 특히 대만문제가 연계되지 않는다면 중국이 한미동맹관계 자체에 대해 노골적이고 적극적으로 반발을 할 가능성은 낮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동은 미국과 미국에 동조적인 중국의 인접국들을 자극하여 오히려 중국이 회피하고자 하는 미중관계의 악화와 안보딜레마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미중관계의 안정기조가 유지되는 현시점에서는 한미 동맹관계의 파열도 강화도 아닌 적정선의 긴장관계에서 유지되는 것이 중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한미군에 대한 중국의 입장도 유추해 볼 수 있다. 중국은 여전히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해서는 주권 및 내정불간섭원칙에 근거해 공식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주한미군에 대해 지금까지 노골적이고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지 않다. 주한미군의 존재가 중국에게 갖는 긍정적 측면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과거에는 주한미군이 한반도의 불안정과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제어하는 역할에 암묵적 동의를 하고 있었다면 최근에는 인접 국가들의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불안 심리를 완화시켜주는 기능을 하여 안보딜레마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를 중국이 제기하기보다는 당사자인 한국이 제기하는 것이 안보딜레마를 초래하지 않는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즉 한반도에 안정기조가 확보되면 자연스럽게 한국 국내에서 철군 논의가 제기되고 이 과정에서 동아시아에 새로운 세력 판도가 형성되는 것이 이상적이므로 중국은 주한미군의 역할이 무의미해지는 국제

환경을 만드는 데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관심은 한미동맹 복원 또는 강화의 내용과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중국은 한미동맹의 전략 동맹관계로의 변화가 양자동맹의 성격에서 지역동맹으로 확대되고 주한미군이 지역문제, 특히 대만 유사 사태시에 개입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다.⁶⁾

중국의 입장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외교 목표로 상정하고 있는 강대국으로의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부상을 실현하기 위한 안보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동북아시아에서 야기될 수 있는 강대국 간의 세력경쟁과 군비경쟁을 구조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다자안보협력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추진에 가장 큰 장애인 주도권 경쟁 문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한국이 미중일 등 강대국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의미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역시 한국의 이러한 역할 모색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가 필요하다.

아울러 동북아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적인 다자간 안보협력이 구축되기까지는 비교적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과도기적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 간의 세력경쟁을 완화하고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는 일정기간 양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이에 대한 미국과 중국 양국의 이해와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6) 닝푸쿠이(寧賦魁) 주한 중국대사는 한국국방연구원(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KIDA) 초청 국방포럼에서 한미 양국이 1월 합의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해 “제3국을 대상으로 행동하게 되면 우리는 관심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며 주한미군이 양안문제에 개입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중앙일보〉 2006/03/23).

중국의 초강대국화와 대북정책

중국의 대북정책 기초

중국의 부상을 위한 한반도의 안정 유지라는 차원에서 중국의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선택은 북한체제의 유지, 북한의 핵개발 반대, 북미, 북일 관계의 점진적, 제한적 발전으로 정리될 수 있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가 미국과의 영향력 경쟁이 첨예화 될 수 있는 주요한 무대의 하나로 상정될 경우, 중국에게 북한은 완충지대로서의 전략적 가치와 미국, 일본, 한국과의 관계에서 전략적 지렛대로서의 가치가 부각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일차적으로는 북한체제의 유지, 더 나아가 북한에 대해 일정한 정치외교적 지렛대를 확보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 중국에게는 대국외교의 차원에서도 '북한카드'의 상실을 의미하는 북한체제의 붕괴나 북중관계를 훨씬 능가하는 북미관계의 급진적인 발전은 억제되어야 한다. 북한체제의 위기, 한미일 동맹의 강화, 중미관계의 악화 등 특수한 상황이 전개될 경우에는 중국에게 안보 완충지대로서의 북한의 존재감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이러한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해서 중국은 여전히 북한과의 기존 동맹조약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견지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국제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북한과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안정화시키는 장기 전략을 구상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중국에게 북한은 전략적 부담인 동시에 자산이다.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북한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관계를 구조화시켜 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2005년 중국이 북한과 “정부주도, 기업참여, 시장운영”이라는 경협3대원칙에 합의하면서 “경제협력협정”에 서명하고, 북핵 실험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북한에 대한 무역 및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시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김정일의 연

이는 중국 방문과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전략적 소통의 강조, 중국식 개혁개방의 소개 역시 북한체제의 안정과 유지를 구조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중국은 2010년 5월과 8월 연이은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서 강조했듯이 북한과의 전략적 소통강화를 통해 북한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다른 한편 북한과의 경제교류를 통해 중국식 개혁개방 모델의 북한 이식이라는 보다 근원적이고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해가고 있다. 2010년 5월 김정일 방중 시, 후 주석은 양국 협력에 대해 5개안을 제시하면서 이례적으로 “내정, 외교의 중대 문제, 국제, 지역정세, 그리고 치당치국(治黨治國)의 경험에 대한 의사소통”을 제의했다(中共中央對外聯絡部 2010). 원자바오 총리는 “중국은 북한의 경제발전과 민생개선을 적극 지지할 것이며 북한에 중국의 개혁개방과 경제건설의 경험을 소개해주고 싶다.”며 더욱 노골적으로 접근하였다(中共中央對外聯絡部 2010). 중국의 입장에서 중국식 개혁개방을 통한 북한체제의 연착륙은 북핵문제 해결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즉 중국은 북한체제의 안정과 친중국체제의 정착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향후 북미관계의 개선에 따른 중국의 상대적 영향력 약화에 대비한다는 중요한 전략적 의미도 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후계승문제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중국의 대북 장기전략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즉 중국은 내정불간섭이라는 오래된 자기 규범에 충실하기 위해 공식적인 표명을 유보하면서 내면적으로는 사실상 김정은 체제가 과연 안정적으로 권력승계를 진행해 갈지에 대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중국은 북한에서 누가 권력을 승계하느냐보다는 얼마나 안정적으로 진행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안정적인 승계를 이룰 수 있는 인물이나 세력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소통과 구조적 관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할 것이다. 이는 이미 김정일의 2010년 5월과 8월 연이은 중국방문에서 후 주석은 여러 차례 공식 석상에

서 “중조우의가 대를 이어 전해져야 한다.”고 강조한데서도 엿 볼 수 있다(中共中央對外聯絡部 2010).

중국의 북핵문제에 대한 정책

중국의 외교 전략과 대북한 정책을 고려할 때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이 기대하는 최선의 정책목표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친중 정권 하의 북한체제의 안정적 유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목표의 대전제는 북한문제로 인해 중국 국내외정세의 불안정과 중국의 부상 과정에 장애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중국 역시 공식적으로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의 이면에는 핵개발로 파생될 수 있는 주변 정세의 악화 — 예컨대 북한 급변사태 발생, 일본 및 대만의 핵무장, 미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력 사용 등 — 를 우선적으로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직접적인 안보 위기가 임박했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한반도의 안정과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미국과의 협력적 관계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일차적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친중 북한체제의 안정적 유지 가운데 양자택일이 라는 딜레마에 처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집중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택일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어느 경우가 더 중국의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는가 하는 판단이 선택의 주요한 기준이 될 것이며, 따라서 상황에 따라 중국의 선택은 변할 수 있다(Lee 2010, 172-173). 중국은 현재까지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우려했던 안보 불안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다. 때문에 북핵이 자국에게 초미의 위협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여전히 북핵은 자위 수단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며, 특히 중국이 그 목표는 아닐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劉阿明·姚曉玫 2007, 75). 따라서 중국은 6자회담의 틀을 활용하여 북핵문제를 관리하면서 장기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안정

적으로 유지해가는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비록 북핵 6자회담에 대한 강한 의지와 집착을 보이고 있지만, 북핵 문제는 본질적으로 북미 양자 간 문제이므로 북핵 해결도 결국은 북미간 회담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저변에 있다. 그럼에도 중국이 6자회담 재개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중국에게 6자회담은 북핵문제가 야기할 수 있는 안보불안을 관리하는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부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보기 때문이다. 즉 중국은 6자회담의 재개를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6자회담이 북핵문제 해결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북핵 6자회담의 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중국이 한반도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 수행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확대라는 목표가 중요시 되고 있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⁷⁾ 예컨대, 스인홍(時殷弘)은 중국이 북핵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중국이 동아시아 국제체제에서 주도국으로 등장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동아시아에서의 미국과의 영향력 경쟁에서도 유리한 국면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時殷弘 2003, 53).

요컨대 중국은 북핵문제 역시 중국의 부상이라는 국가 목표의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중단기적으로는 북핵문제가 중국의 안보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6자회담을 통해 관리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인접국인 북한을 친중국의 안정적인 체제로 정착육성시키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상에 따라 핵문제에 의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을 지속시키고 있고, 나아가 협력을 구조화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7) 중국의 한반도에서의 적극적 역할 의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1차(1993-1994) 북핵 위기 때와 명확하게 대비되는 2차(2002-2003) 북핵 위기에서의 중국의 대응 태도이다. 즉 1차 북핵 위기에서 중국은 수동적이고 주변적인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2차에서는 적극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자임했다. 중국의 적극적 역할에 대해서는 Goldstein(2007, 662-663)을 참조.

중국의 미래 북한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

북한 급변사태 등 북한의 장래 문제에 대한 민감도가 한국 다음으로 높은 국가가 바로 중국이다. 따라서 중국은 내부적으로는 이미 자체적인 비상대응태세(contingency plan)가 갖추어져 있을 것으로 유추된다. 중국은 14개 국가와 육로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건국 이후 이들 국가 모두와 직간접의 국경분쟁과 협상을 경험하였다(이동률 2008b, 25-30). 중국은 전세계에서 국경분쟁에 관련한 그 어떤 나라보다도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국가라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에게 북중 국경지대는 이미 해양세력의 중국 진출 통로였던 역사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북한 내부 정황에 대해 예민하며 그에 대한 대비도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중국의 북핵문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이중적 태도도 북한 체제의 안정적 유지라는 정책 기조와 연계되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둘 것이다. 즉 북한 내부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사태 발생 이전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사태 발생을 예방하는 데 진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일차적으로는 급변사태가 국경너머 중국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국은 일차적으로 북중 국경지역을 봉쇄할 것이고, 만일 급변사태가 악화되거나 장기화 조짐을 보일 경우 북한 내의 질서 회복을 명분으로 개입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예상된다. 이와 관련 2007년 6월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CSIS)와 미국평화연구소(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USIP)의 전문가 3명이 중국을 방문하여 실시한 정부, 군, 학계의 한반도 전문가들과의 인터뷰에서도 중국 측은 북한의 불안정사태 시 대량난민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 통제를 강화하겠지만 불가피할 경우 인민해방군의 직접개입을 통한 문제해결도 고려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USIP and CSIS Joint

Working Paper 2008).

일반적으로 급변사태 발생에 따라 군사적 개입을 시도할 경우 예상 가능한 방법은 세 가지, 즉 단독 군사개입, 다국적군의 일환으로의 개입, 그리고 유엔 평화유지활동(Peace Keeping Operation: PKO)을 통한 개입이 있을 수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세 번째 방식, 즉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유엔 PKO의 일원으로서 사태에 주도적인 역할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최근 PKO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이미지, 위상, 그리고 영향력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즉 중국은 유엔 PKO라는 방식을 통해 인도주의적 임무 수행의 명분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사실상 북한 사태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하는 접근방식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직접 단독으로 군사개입을 하는 것보다는 유엔을 통해 우회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재 중국의 외교전략 및 목표와도 부합한다. 즉 유엔을 전면에 내세우는 접근방식은 중국에게 북한사태 직접 개입에 따른 국제사회의 반발과 중국위협론 확산을 최소화하면서,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책임대국으로서의 이미지와 위상을 확보하고, 동시에 사실상 북한에 대한 기존의 영향력과 지배력을 강화할 수도 있는 다목적의 대응방식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대응 태세는 결국 미국이 어떠한 대응을 하는가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 역시 북한 급변사태와 관련 내부적으로는 미국과의 논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한미중 간의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역시 무엇보다도 삼국 간에 일정한 전략적 신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 급변사태는 결국 한반도의 통일 과정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통일과 그에 따른 한반도 내에서의 세력관계의 변화에 대한 양국의 이해가 일치되어야 비로소 깊이 있는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한반도를 둘

러싸고 미중의 세력 경쟁의 가능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분명한 현실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중국은 강대국으로 부상해가는 전략적 기회의 시기, 즉 향후 10여 년은 기본적으로 통일을 포함한 한반도의 현상변화 자체를 지역 불안 요소로 인식하며, 북한의 체제유지에 최우선 순위를 두게 될 것이다. 그런데 중국의 한반도 현상유지 선호라는 선택의 보다 핵심적인 내용은 무조건적인 한반도 통일의 반대라기보다는 한반도 통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중국 주변정세의 불안정성 증대와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상실에 대한 우려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입장에서 통일이 분명한 하나의 대세로 등장할 경우, 최선의 정책 목표는 우선 통일 과정이 가능한 한 안정적이고 점진적으로 완만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그리고 통일한국은 친 중국적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중국에 적대적인 세력이 되거나 또는 적대적인 세력의 배타적인 영향권에 들어가는 안 된다는 방향으로 조정될 여지도 있다. 한반도 통일이 향후 상당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부상 그리고 그에 따른 미중관계의 변화가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향후 중국의 부상과 그에 따른 미중 간의 대결과 타협이 구조화될 경우, 어느 경우든 한반도문제에 대한 한국의 역할과 발언권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 중심의 한반도 통일환경을 형성하려는 의지와 시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미중 간의 제한적 경쟁이 진행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한국은 점진적으로 미중 등 강대국이 개입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축소해가는 한편, 북한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주도권을 확보해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돌이킬 수 없는 하나의 대세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 내에서는 한반도의 통일이 진행된다면 그 주도권은 한국이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결국 한국 주도의 한반

도 통일 실현 가능성을 가상해서 무조건적인 한반도 통일의 반대라는 선택보다는 오히려 통일 후 한국과의 관계설정과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보를 고려한 전략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중국은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게 부정적인 측면만 있지 않다는 논의도 활발하게 개진되고 있다.⁸⁾

중국의 초강대국화와 한국외교의 과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부상이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한국의 대중외교와 한중관계에 우려했던 도전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중국의 부상과 그에 따른 세력관계 변화의 실체에 대한 냉철한 이해가 필요해지고 있다. 우선 중국의 급격한 부상은 한중관계의 비대칭성을 예상보다 빠르게 확대시키고 있으며, 중국에게 한국의 전략적 가치와 위상 역시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감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한중 양국이 양적 관계 팽창에 부합하는 신뢰를 미처 형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양국 간 힘의 변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한국이 이러한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노출하고 있다. 동시에 양국 국민들 사이에서도 상대국에 대한 인식의 격차가 커지면서 정서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 또한 양국관계를 악화시키는 변수가 되고 있다. 중국의 부상과 그에 따른 영향력 증대에 대한 보다 냉철한 현실 인식을 전제로 대중외교의 방향성을 국가적 차원에서 정립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보다 중요하고 심각한 도전은 중국의 부상이 예상보다 빠르게 동아시아 지

8) 중국에서는 한반도 통일이 첫째, 중국과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에 유리하고, 둘째, 주한 미군의 철군 논의가 진행되는 등 중국과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유리한 국제관계의 재편이 촉진될 것이며, 셋째, 양안 통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통해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 반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의도를 내재하고 있지만 동시에 통일 이후 한국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기대의 일면을 엿 볼 수 있다(李敦球 2007, 6; 張璉瑰 2004, 35-36).

역에서 선행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대미정책과 중미관계에 더욱 신속하게 종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중국 부상에 따라 미중 간 갈등, 경쟁, 그리고 타협의 파장이 한반도에 끼칠 영향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근 천안함사건 직후의 미중 간 갈등은 동아시아 발 또는 심지어 한반도 발 미중 세력경쟁이 초래될 가능성마저 상정한다.

비록 동아시아에서의 미중 갈등이 가까운 장래에 본격적인 세력경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할지라도 역내에서의 미중 갈등은 취약한 안보 구조와 분열적 정치지형을 지닌 한국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한중관계를 양자관계 차원을 넘어서 복합적 관계 구조에서 파악하는 거시적 시야가 요구되고 있다. 동시에 미중관계의 변동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대비가 한국의 주요한 외교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미중 갈등과 경쟁구조 자체를 한국이 조정할 능력이 없지만 최소한 아직은 미중 갈등이 한반도에 전이되거나, 또는 한반도 문제로 인해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시간적 여지는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011년의 미중 정상회담은 우리에게 다른 맥락에서 중요한 외교적 시사와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천안함사건 이후 한반도 문제가 급속하게 미중 간 갈등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타협의 결과에 따라 향후 한국이 대화국면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교적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우선 한반도의 운명이 향후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갈수록 미중 양국의 갈등뿐만 아니라 타협의 결과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미중 양국이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원론적 합의를 통해 한반도 문제로 인해 양국관계가 훼손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고, 또한 양국 간 온도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반도 정세의 급격한 변화와 불안정성을 기피하고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다. 이는 결국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의

상대적 영향력은 증대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의 입지와 발언권을 확보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강대국 간 협력과 경쟁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국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의 입지를 확보하는 노력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대화국면이 재개되어 참여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교훈을 새기면서 한반도 문제의 해법을 찾는 보다 치밀하고 전향적인 의제를 창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주도하는 정교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중국은 향후 10년을 부상을 위한 “전략적 절호의 시기”(戰略機遇期)로 간주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부상속도를 감안할 때, 실제로 향후 10년은 부상하는 중국의 실체가 보다 분명하게 형상화될 것이며, 동아시아의 세력관계도 보다 구체적인 모습을 띠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중관계에서도 향후 10년은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향후 10년간 한국이 부상하는 중국과 어떠한 관계를 정립할 것인가는 미래 초강대국 중국과의 관계를 규정할 가능성이 높으며, 나아가 강대국 간 세력경쟁 구도에서 한국의 생존 공간 확보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어느 때보다도 중국의 부상과 그에 따른 세력관계 변화에 대한 한국 정치지도자들의 냉철하고 예지력 있는 현실 인식과 판단이 요청되는 시기이다.

부상하는 중국은 한국과 한반도를 영향력 확대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미국과의 영향력 경쟁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하고 한국과의 관계 발전을 모색해 왔다는 사실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실제 중국의 한국에 대한 전략과 정책은 안보딜레마를 해소하면서 안정적인 한반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협력안보를 지향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인식과 실제 정책 사이의 괴리는 산적한 국내외적 제약과 과제를 해결하면서 여전히 강대국으로의 부상을 지향하고 있는 중국이 안고 있는 딜레마의 현주소이기도 하다.

한국 또한 세계적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위치해 있는 지정학적인 이유로 인해 미중관계의 변화가 한국과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특히 상대적 약소국의 입장에서 미중관계의 변화를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도록 조정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마저도 상정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이 한국이 직면한 현실이다.

그리고 동북아에서 다자안보협력을 구체화하는 지난한 과정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중단기적인 과제는 한중 동반자관계, 한미 동맹관계, 그리고 중미 협력 동반자관계가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일정기간 공존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하며 따라서 상충될 개연성이 있는 양자간 관계에 대해 한중 양국 상호간의 이해와 신뢰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즉 앞으로 동아시아에서 다자안보체제가 구체화될 때까지는 한미동맹과 한중동반자관계의 공존이 현실임을 한중 양국이 인정하고 양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와 같이 한미동맹을 통해 중국을 견인 또는 견제하려는 시도는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미중 간 세력경쟁의 소용돌이에 깊숙이 빠져들지도 모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부상하는 중국이 한미동맹 구조 하에 있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진 채 견인되는 상황으로 귀결될 수 있다. 부상하는 중국이 한국의 전략적 의도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될 경우 장기적으로 한중관계에서 신뢰를 강화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다. 즉 중국에게 한국은 경계와 견제의 대상으로 고착화되어 한중관계는 만성적 긴장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반면, 북한의 대중 의존도는 강화되고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부정적 영향력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어설픈 양다리 걸치기(hedging strategy) 또는 관성적인 편승(bandwagoning)을 모색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착실하게 독자적인 생존 공간을 확대하고 국제적 위상과 전략적 가치를 제고해가야 할 것

이다. 이는 통일을 포함한 한반도 미래 설계를 위해서도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과제이다. 그 출발은 우선 북한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것이다. 중국에게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하는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는 한국이 중국보다 더 많은 북한에 대한 정보, 채널, 그리고 지렛대를 확보하는 것이다. 즉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이 한국을 경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북중관계의 기복에 일희일비하면서 즉각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중국이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을 축소해가는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북한 압박 또는 설득에 중국을 견인하려는 시도는 장기적으로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겨냥해서라도 중국을 대상으로 한국이 북한과 외교경쟁을 벌이는 듯한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한중 양국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대전제에서는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거시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포괄적 차원의 북한문제와 한반도의 장래 문제에 대한 중국과의 협의와 소통 강화를 통해 전략적 신뢰를 강화시켜가야 한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한국이 중국의 적대세력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양한 형태의 미니 다자주의(minilateralism)에 적극 참여하고 주도하여 글로벌 네트워크가 강한 국가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글로벌 네트워크가 강한 한국을 만들어 전략적 위상을 높이고, 미국, 중국과 더불어 지역 및 세계적 이슈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향후 등장할 수 있는 미중 간 세력경쟁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쌍무적 관계를 뛰어넘어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에 긴요한 조정자로서의 한국의 입지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한국이 지향하는 원칙과 비전을 내부적으로 명확히 정립하고 이를 기초로 국제사회에서 원칙 있는 행위를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해 나가야 한다. 향

후 미중 간의 국제규범과 표준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될 경우,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보다 명확한 입장에 대한 미중 양국의 관심과 요구가 제기될 수 있다. 한국은 사안에 따라 즉흥적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규범과 원칙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기초를 확립하고 일관성을 유지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미중 양국이 양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 참고문헌

- 김흥규. 2009. “중국의 동반자외교 소고 : 개념, 전개 및 함의에 대한 이해”. 〈한국정치학회보〉 43, 2.
- 이동률. 2008a. “한중정치관계의 쟁점과 과제”. 《중국의 부상 : 동아시아 및 한중관계에의 함의》, 전성홍, 이종화 편, 227-238. 서울 : 도서출판 오름.
- _____. 2008b. “중국의 영토분쟁과 해결 : 쟁점과 요인”. 《중국의 영토분쟁》, 이동률 외. 서울 :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10. “중화민족주의, 중국 부상의 이데올로기인가?” 〈지식의 지평〉 9.
- _____. 2011.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교훈”. JPI PeaceNet No.2011-01.
- 이상현. 2008. “변화하는 한미관계와 중국변수”. 제4회 한미중 미래포럼 발표논문. 11월 29일. 〈중앙일보〉 2006년 3월 23일.
- 徐文吉. 2007. “中韓建交15周年雙邊關係盤點與前景展望”. 〈東北亞論壇〉 4.
- 時殷弘. 2003. “危險和希望-伊拉克戰爭背景下的朝鮮核問題”. 〈教學與研究〉 5.
- 劉阿明·姚曉玫. 2007. “朝鮮核問題與中美利益博弈”. 〈國際觀察〉 2.
- 李敦球. 2007. “冷戰後中韓關係的發展與東北亞格局—中韓建交15年來雙邊關係的回顧與展望”. 〈當代韓國〉 2.
- 張璉瑰. 2004. “朝鮮半島的統一與中國”. 〈當代亞太〉 5.
- 中共中央對外聯絡部. 2010. “朝鮮勞動黨總書記金正日對我國進行非正式訪問”. 5月 7日.
<http://www.idcpc.org.cn/dongtai/100507.htm> (검색일 : 2010/11/16).
- 戴秉國. 2010. “堅持走和平發展道路”. 12月 6日.
<http://www.fmprc.gov.cn/chn/pds/wjdt/gjldrhd/t774662.htm>.
- 中華人民共和國與美利堅合眾國聯合聲明. 2011
<http://www.fmprc.gov.cn/chn/pds/ziliao/zt/dnzt/hujintaozhuxifangwenmeigu/t788163.htm> (검색일 : 2011/01/30).
- 開創中美夥伴合作新局面之旅—外交部長楊潔篪談胡錦濤主席對美國進行國事訪問. 2011.
<http://www.fmprc.gov.cn/chn/pds/ziliao/zt/dnzt/hujintaozhuxifangwenmeigu/t789064.htm> (검색일 : 2011/01/30).
- Goldstein, Avery. 2007. “Power Transitions, Institutions, and China’s Rise in East Asia:

- Theoretical Expectations and Evidence,” *The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30, 4-5.
- Lee, Dong Ryul. 2010. “China’s policy and influence on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denuclearization and/or stabil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22, 2.
- Miller, Alice. 2010. “The 18th Central Committee Politburo: A Quixotic, Foolhardy, Rashly Speculative, But Nonetheless Ruthlessly Reasoned Projection,” *China leadership Monitor* 33.
- USIP and CSIS Joint Working Paper. 2008. “Keeping an Eye on an Unruly Neighbor.” January 3.